

광주시-시교육청 12억원 놓고 '내 돈 공방'

학생회관 증축비용 잔액 시 중간정산서 "반환" 약속 최종정산서 "줄 것 없다"

시교육청, 市 단청에 반발 "예산 핑크...빨리 반환하라" 시의회 "의결안 뒤집나"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 증축사업비 집행잔액 12억원을 놓고 '내 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해 사업비 12억원을 넘겼는데 서로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1일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원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구도심에 있는 학생회관을 서구 삼촌동으로 옮기기로 하고, 국비 68억원, 시비

103억8354만원, 교육청비 79억9668만원 등 251억8023만원이 투입해 이설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됐던 사업은 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상 2층 규모로 축소하면서 도서관 기능이 폐지됐다. 그러자 광주시교육청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예산 79억여원을 투입할 테니 3·4층을 증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속 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교육청예산을 받아 3·4층 증축공사를 마치고 광주시교육청에 운영권을 넘겼다.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중간정산을 통해 국비 6711만원, 시비 1억216만원, 교육청비 11억9861만원을 절감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 이어 낙찰차액 등 잔액은 추경을 통해 정산하겠다는 공문이었다. 연도별로 2012년 7276만원, 2013년 12억9513만원을

절감했다는 집행내역도 첨부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4년도 광주시 제1회 추경에 반영돼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시가 교육청에 사업비 잔액만 보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잔액을 보내지 않았다. 교육청이 잔액반환을 독촉하자, 지난해 12월31일 "최종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오히려 1억 7957만원이 추가 집행됐다고 통보했다.

예산 절감을 통해 지방비 19억여원을 남겼는데, 교육청예산은 전액 집행했고 남은 예산은 모두 시예산이라는 것이다. 교육청에 들어와야 할 돈이 시 예산으로 둔갑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간정산엔 건축비 등이 누락됐었다"며 "최종정산때 바로잡았더니 오히려 교육청예산보다 1억8000만원 더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 단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정산과정에서 누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을 시가 뒤집었다. 시의회를 농락한 행위"라고 격분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산 과정에서 12억원을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환한다고 해서 올해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핑크' 나면 교육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빨리 집행잔액을 반환해달라"고 독촉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회관이 시설 협회 때도 사업비가 남으면 학생회관 유지관리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광주시의원도 "시와 교육청의 '내 돈' 공방은 끝본건으로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학생회관은 광주 학생과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예산집행잔액은 학생회관 유지비용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권사각 '알바는 서러워'

33% "폭행 당한 경험있다"...임금체불도 17%나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조사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경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고용주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명 이상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아르바이트 시작 나이는 18.6세로 파악됐다.

2일 광주시가 최근 3개월간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자 1003명(15~35세)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16.9%(170명)가 임금체불을 당했고,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폭행을 당한 경험자도 33.4%(342명)에 달했다.

32.7%(329명)는 아르바이트 도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4.8%(148명)는 계약 이외의 부당한 업무강요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에도 이들은 '참는다'(50.8%) 그만둔다(40.0%)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33.2%)하거나, '신고해도 소용없

다'(25.5%) 등을 꼽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청소년들의 첫 아르바이트 시작 나이는 18.6세로, 이들의 구직 경로는 친구 등 지인 소개(57.7%), 아르바이트 사이트(49.6%·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공인노무사를 '알바지킴이'로 채용, 각 자치구 취업상담사와 연계해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접수와 구제 등 노동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교교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인권 상담 및 문의는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062-951-1983, 1588-6546.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건설사 사주 처남이 공사 미끼 사기행각 거액 챙긴 60대 법정구속

건설사 사주의 처남으로 영향력을 과시, 건설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주겠다고 속여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H사 사주 처남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 광주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45)씨에게 "H사가 시공 중인 해남 화원 공사현장에 (A씨) 동생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해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2년 4월까지 46차례에 걸쳐 A씨 등 피해자들에게 1억8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견 기업 사주 인척이라는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목마른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지적한 뒤 "이씨가 수사와 재판 개시 이후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춘방 보며 봄 기다리는 가족

입춘을 사흘 앞둔 1일 광주시 북구 시립민속박물관 유리문에 붙여진 입춘방을 한 가족이 바라보고 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입춘을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입춘방을 써서 나눠주는 행사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해경 123정장 선고 공판 방청권 있어야 입장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비난을 받았던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이 허용된다. 법원은 방청권 소지 유지를 위해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예정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 대한 선고 공

판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청권 소지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조법정(204호)의 경우 선착순 입장,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법정(201호)에는 피해자측(50석)에 제공되는 것 외에 20석을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방청 여부는 오는 2~4일 광주지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은 뒤 5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월드컵경기장 헬기장에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헬기(BK117-B2)를 활용, 30~70m 높이를 오가며 헬기로 인한 소음 및 바람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 '깜코 사건' 핵심 3명 징역 3~7년 구형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일명 깜코 사업) 핵심 인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30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모 대표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자문위원 박모·장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광주시민인 형세를 남비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5만 달러를, 장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4만 달러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7월 광주시와 합작한 미국 측 사업자인 K2AM(모회사, K2Eon(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깜코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 개발을 목표로 GCIC와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으로, 광주시는 GCIC를 통해 K2AM에 67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K2AM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2012년 사업 무산을 선언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개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상대 밀친 30대 경찰서행



○...길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개 싸움에서 상대 개의 주인이 자신

의 진돗개에게 발길질했다는 이유로 밀어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최모(30)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광산구 송정동 황금사우나 앞에서 목줄이 풀려 달아난 자신의 진돗개가 장모(62)씨의 개에 물린데다 상대 개의 주인

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어개로 장씨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것.

○...개싸움에서 비롯된 이들의 다툼은 폭행을 당한 장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로 이어졌는데, 진돗개 주인 최씨는 "혈통있는 우리 개에게 함부로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자 다급한 마음에 (장씨를) 밀친 것 뿐인데 경찰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015년도 소상공인 사관학교(1기) 교육생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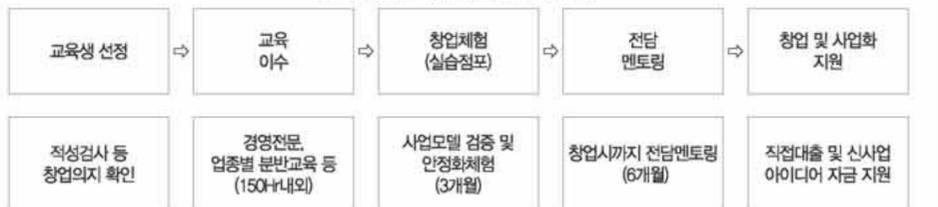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 (사업개요) 신사업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20세 이상)를 선발하여 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정책자금,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합 지원해 창조형 소상공인 창업 촉진
 - * 신사업 아이디어 사례는 소상공인포털(www.sbz.or.kr)을 참고하되, 사업내용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 선정취소될 수 있음

-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20세 이상)
- ▶ (교육장소) 공단 전용교육장(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 ▶ (선정규모) 교육인원 150명 / 점포체험 120명(교육수료자 중 평가·선정)
 - * 전용교육장별 30명 내외 선정예정
- ▶ (신청기간) '15. 1. 19(월) ~ 2. 6(금) (18시까지)
 - * 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능
- ▶ (선발절차) 적성검사(워크넷: www.work.go.kr 이용), 서류심사(신용등급, 사업계획서 등), 심층면담 등의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 *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당선자는 우선 선발(신청서 제출 필수))
- ▶ (신청서) 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228번에서 '소상공인 사관학교 입학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 ▶ (접수) 이메일(kms2395@semas.or.kr) 신청, 전용교육장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전용교육장 ☎ 서울: 02-723-0173 / 부산: 051-463-0212 / 광주: 062-367-0135 / 대전: 042-363-7767 / 대구: 053-353-7667
-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 042-363-7821~5)

- ▶ (교육이수 후 혜택)
 - 우수 교육생(상위 80%, 120명)에게 점포체험 운영기회(3개월) 제공
 - 사관학교 수료(교육, 점포체험 포함) 후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직접대출(우자)로 창업지원
 - 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5백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 * 단, 사업화 소요자금이 총 50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25백만원까지 보조가능 (국비 50%, 자부담 50% 조건)

<소상공인 사관학교 운영 절차>



* 소상공인 창업교육기관(100곳 내외) 및 교육생 멘토링을 담당할 상담회사도 모집 하오니(1.19~2.6) 많은 신청바랍니다.

